

아세안 국가의 부패 현황과 전망

: 경험적 이해

이 상 환*

요약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아세안 국가들(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을, 시간적 범주로서 최근 상황(1995~2014년 자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인(neo-liberalistic) 맥락에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H)의 민주화지수(Freedom Ratings; FR) 및 World Bank의 각종 경제·사회문화적인 자료를 토대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요컨대 투명성 혹은 반부패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러한 민주화는 투명한 사회를 낳고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신자유주의적 맥락의 가설을 아세안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살펴보고, 아세안 내 국가 간 부패 문제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 그리고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를 지역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는 보여주고 있으나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의 상관관계는 일반 이론의 주장과 거리감이 있다. 하지만 연관성을 검증하는 교차 분석을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leepol@hufs.ac.kr

할 경우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 및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연관성을 지역적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다. 즉 정치민주화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투명성이 높다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부패 척결이며 이는 정치민주화 및 경제발전을 통해서 가능함을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부패 척결이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다.

주제어: 아세안, 부패, 투명성, 민주화, 경제발전

I. 서론

국제사회는 최근 급속한 속도로 세계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문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패 상황이다. 이들 국가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이 부패척결의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정치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과 정치엘리트의 투명성 제고가 반부패의 요건이며 경제발전이 그 토양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의 실질적 민주화와 이에 따른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이들 국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Korea-Indonesia Forum 2013’과 2012년 한국과 베트남 간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Korea-Vietnam Forum 2012’의 양국 당국자 간 패널 토론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모두 고민하는 사항은 국가 내 뿌리 깊게 존재하는 부패 척결 문제였다. 최근 아세안 내 중심 시장이자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이러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보다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는 데 선결 조건은 부패 문

제의 해결인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포럼에서 한 인도네시아 학자는 “부패 척결 없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요원합니다. 경제발전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부패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인 것이다.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이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특히 부패와 정치민주화 간, 부패와 경제발전 간, 그리고 부패와 정치민주화 및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 지역적(cross-national) 및 개별국가적(time-series/case-oriented) 부패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는 연구작업인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부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예외적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연구의제로 시의적절하고, 그 학문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본다.

“아세안 국가의 부패 현황과 전망: 경험적 이해”이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아세안 국가들을, 시간적 범주로서 최근 상황(1995~2014년 자료)¹⁾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인(neo-liberalistic) 맥락에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H)의 민주화지수(Freedom Ratings; FR) 및 World Bank의 각종 경제·사회문화적인 자료를 토

1)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 작점이 1995년 이고 사실상 반부패라운드 출발시점도 1999년 2월 이후라서 연구 대상 기간을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으로 하였다.

대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요컨대, 투명성 혹은 반부패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러한 민주화는 투명한 사회를 낳으며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신자유주의적 맥락의 가설을 아세안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고 아세안 내 국가 간 부패 문제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부패 관련 이론에 근거하여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적 차원에서 부패,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횡국가적 분석(cross-national analysis)과 교차분석(contingency table analysis)을 하고자 하며, 개별국가적 차원에서도 시계열 자료(time-series data)를 통해 이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연구방법은 주로 수집한 1차 자료를 일변량 통계로 분석하고 나아가 그 상관관계(correlation)를 파악하는 것이다. 부패,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부패인지수(0~100), 민주화지수(1~7),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및 소득불균형지수(Gini coefficient/0~1) 등의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가투명성, 정치민주화 및 경제발전 관련 이론 고찰

국제사회의 부패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오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 (Corruption is the ab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부패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부패의 정

의를 크게 분류하면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행위자 중심의 부패와 제도나 정치체제에 중심을 두는 구조적 부패,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분류의 부패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권력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부패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워렌(Mark E. Warren)은 현대의 부패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패의 개념은 많은 경우 정부 혹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의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의 정치현상에서 나타나는 부패 현상은 단순히 정부와 공무원에 의한 부패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치행위 자체가 중앙집권 형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치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NGO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거대한 무역회사, 과학연구팀, 제약회사, 대형병원, 전문적인 사회단체 등은 이미 정부나 의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다(Warren 2004, 331-332). 따라서 이제는 공공부분이나 정부 영역에 한정하여 정의되었던 부패의 개념을 비정부 분야(non-governmental areas)에 까지 확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부패의 정의를 종합하면,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비정부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부패 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수(CPI)를 활용하고자 한다. 1993년에 설립되어 세계 각국에 지부가 있는 국제 반부패 NGO의 대표적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TI는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부패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나타내는 국가별 CPI를 1995년부터 매년 독일 괴팅겐대학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해 왔다. 17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TI의 2014년 부패지수는 TI가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신력을 지닌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된 기존의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의미하는 바는 ‘부패의 정도’라 할 수 있다.

CPI는 주로 기업인과 정치분석가의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취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부패의 정도가 심할수록, 즉 청렴도가 낮을수록 낮은 점수(0점)를 받는 반면, 부패의 정도가 약할수록 높은 점수, 즉 100점에 근접하게 된다. 부패지수는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체감지수이며 대상 국가의 일반적인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패지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부패의 규모 및 강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표준편차는 설문조사 자료에 따른 부패인지도의 격차를 의미하며 그 값이 클수록 해당국가에 대한 부패인지도가 설문조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된 설문조사자료의 수가 많을수록,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CPI의 신뢰도는 증가한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민주주의의 개념은 그것에 대해 정의하는 학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규범적 성격과 비교분석에 요구되는 개념적 등가성의 확보문제가 상충되어 일목요연하게 개념화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개념정의를 놓고 학자들 간에는 이상과 현실, 또는 이론과 실천 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크게 대별하면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졌을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 접

어 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민주화 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 즉 민주화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프리덤하우스는 1978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관한 연간 보고서 ‘세계 자유 현황(Freedom in the World)’을 발간해 왔다. 더불어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27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민주적 변화(Nation in Transit)’라는 민주화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 각국 및 지역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한다. 기준이 되는 민주주의의 개념은 민주화 정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최소정의에 따르고 있다. 프리덤하우스가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그룹들 가운데서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지배자(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임명된 개인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유는 “시민들이 정부나 다른 어떤 지배 세력들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Freedom House 2015).

먼저 ‘Freedom in the World’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정치적 권리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투표할 권리와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시민적 자유’는 “국가의 방해 없이 여론을 형성하고, 제도에 참여하며 개인적인 자율권을 지닐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Freedom in the World’의 평가는 프리덤 하우스에 소속된 30여 명의 학자와 분석가들이 동일한 점검항목(정치적 자유 10항목, 시민적

자유 15항목)을 가지고 각국별로 항목마다 점수를 할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점검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는 합산을 통하여 1에서 7까지의 등간척도를 사용한 종합 평가로 귀결된다. 1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가장 높은 것이며, 7은 반대로 가장 낮은 것이다. 종합 평가에서 1.0-2.5는 ‘자유국가’로 간주되며, 3.0-5.0는 ‘부분적인 자유국가’로 평가된다. 그리고 5.5-7.0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이다(Freedom House 2015).

민주화를 위한 길에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있다. 그리고 부패를 척결하는 데는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에서 반부패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정치적 민주화의 낙후 문제이다. 상당수의 개도국들이 1980년대 이후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권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려는 지도층의 비민주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를 뽑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선거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성패 여부가 선거과정의 투명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만성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만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바른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숙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경제수준을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및 국민소득불균형지수(Gini coefficient)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국민총소득, 즉 GNI는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교역조건에 따른 무역손익을 반영한 소득지표로 최근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그 활용

도가 높은 지표이다. GNI는 GDP에다 수출입 가격의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해외유출과 유입을 반영한 무역손익과 실질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합친 것이다.²⁾ 한편, GDP는 한 국가 안에서 자국민이든지 외국인이지든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합을 말하는 GNP, 즉 국민총생산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소득양극화란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소득불균형은 계층 간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반드시 소득불균형 정도까지 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빈부의 격차는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던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완전히 평등한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개인적, 제도적, 사회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이다.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벌어져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불균형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한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

2) 첨언하면, 국민소득을 그 시점에서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이 명목국민소득이고,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실질국민소득이다. 명목국민소득은 당해 연도의 생산물에 당해 연도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고, 실질국민소득은 당해 연도의 생산물에 특정기준시점의 가격(불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의 소득불균형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및 국민소득불균형지수(Gini coefficient)는 한 국가 내 국민의 사회적 만족도 혹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의롭지 못한 분배구조가 사회적 불만을 심화시키고 부패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척도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별로 정치민주화와 반부패 상황을 살펴보면, 반부패는 일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제고되어 있고, 정치민주화 역시 약간의 예외가 있으나 비교적 일관성 있게 그 수준이 높을수록 제고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정치민주화와 반부패 상황은 그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단언할 수 있다. 변인 간 어느 것이 우선 하느냐를 쉽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경제발전이 정치민주화 및 투명성과 함께 진행됨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2.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1990년대 이후 부패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국제적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고질적인 병폐로서 부패를 인식하고 주로 도덕적·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해 온 반면, 오늘날의 연구는 통상문제와 연관된 국제사회에서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즉, 부패가 경제성장이나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또는 국제 통상과 관련하여 부패가 갖는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국제적 부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부패 연구의 영역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

양한 학제 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각각의 학문 영역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패 현상과 이에 따르는 부패의 발생론적 배경, 개념 정의, 측정 등에 따른 모형의 구축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방법론적 문제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고 비판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마다 부패한 행위를 규정하고 받아들이는 도덕적·법적 기준의 차이 때문에 부패에 대한 연구는 개념정의뿐만 아니라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제적 부패 연구의 대다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나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여러 기관에서 기업가 또는 전문가의 설문에 기초한 부패지수나 다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종합지수를 이용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국제적 부패 연구에 있어 부패에 대한 정확한 경험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을 행하는 경험적 연구가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부패 관련 경험적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부패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례연구이다. 둘째, 부패 현상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을 수행하는 사례연구이다. 셋째, 부패와 경제현상에 관한 가설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을 하고자 하는 연구이며, 특히 이러한 종류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부패지수에 기초하여 횡국가적(cross-national)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나 지역을 교차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부패를 검토하는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부패 현상과 사회경제적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패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성장과 투자에 대한 부패의 영향(Keefer & Knack 1996; Mauro 1995; 1998), 정부 지출의 구성비에 대한 부패의 영향(Mauro 1998; Tanzi & Davoodi 1997) 등을 통해 부패의 효율성에 대

한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키퍼와 낱(Keefe & Knack)은 부적합한 법적·정치적 규제제도가 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취약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에 대한 부패의 부정적 영향은 GDP대비 투자율과 부패의 관계에 대한 모로(Mauro 1995)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입증되는데, 그는 *Business International*이 발표한 부패지수를 토대로 67개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율과 부패간의 관계가 음의 관계에 있음을 파악했다. 부패의 부정적 영향은 키퍼와 낱(Keefe & Knack 1996)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또한 브루네티, 키순코 및 웨더(Brunetti, Kisunko & Weder 1997)의 연구도 부패가 경제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위험을 증가시키고 투자율을 크게 낮추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1인당 GDP와 부패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Paldam 1999; Gupta, et al. 2002). 이들 연구에 따르면 빈곤국들은 부패와 효과적으로 맞설 사회적 기반이 약하며, 부패는 국가 전반적인 비효율을 야기하여 국민생활 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패는 사회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왜곡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소득수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인이 된다. 굽타와 다부디 및 알론조-팀(Gupta, et al. 2002)은 부패지수와 소득수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 즉,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지니계수 또한 증가하는 관계를 보임으로써 부패가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GDP 대비 외국인투자율과 부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램스돌프

(Lambsdorff 1999)는 부패가 투자위험을 높임으로써 외국인의 자본 유입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휠러와 모디(Wheeler & Mody)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부패수준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통계적 결과를 제시하면서 몇몇 신흥공업국들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는 부패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하나의 방향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제구조와 관료조직, 자국기업의 관행, 부패가 조직화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부패 행위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Maitland 2002; Herrera & Rodriguez 2002).

이 외에도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 및 공적 영역의 범위에 따른 부패 발생의 원인, 경로와 결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부패를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경제적 행위로 한정하여 공적 영역의 범위 혹은 공공서비스 공급과 부패 수준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휘스만과 개티(Fisman & Gatti 2002)는 정부의 탈집중화 정도와 사적 기업의 지대추구행위와의 관계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결정의 탈집중화 정도가 높을수록 부패의 수준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링과 데커(Gerring & Thacker 2002)는 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이 적을수록 부패 발생의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그는 통상정책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규제정책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공적 영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구성하여 이들 지표와 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통상정책의 성격이 개방적일수록, 규제정책이 적을수록 부패의 발생유인이 적어진다는 가정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이러한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부패 자체에 대한 개념정의

에 따라 조작화가 달라지고 정확한 통계적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경험적 연구는 모로도 지적했듯이 부패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변인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 방향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즉 인과관계의 방향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방법론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는 부패의 개념정의와 관련된 것인데 부패 개념에 대한 상이한 정의 때문에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정의(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의 남용)에 기초해서 조작화 및 측정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의 상이한 유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이론창출을 위한 사례분석이나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적 연구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과 관련된 질문·기법의 적합성, 증거의 성격·사례들의 유용성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궁극적으로 경쟁적인 설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게 현상들 사이의 공변성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분석틀 및 개념의 활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Lancaster & Montinola 1997).

Ⅲ. 아세안 국가의 부패 현황

<표1>에 의하면, 아세안 국가의 부패인지지수 평균은 38.2로 부패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면 7위인 싱가포르와 156위인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가 부패로 인해 어

<표 1> 아세안 국가의 부패인지지수, 민주화지수, 1인당 총소득 및 지니계수*

세계 지역	국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 (2014)		프리덤하우스의 민주화지수*** (2014)		경제 통계자료**** (2013/2010~2012)	
		순위 (175 개국)	부패인지 지수(CPI)	민주화 지수(FR)	등급	1인당 국민총소득 (GNI per capita)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0~100		1~7		현 US\$	0~1
아세안 (10 개국)	싱가포르	7	84	4.0	부분적 자유국	54,040	-
	말레이시아	50	52	4.0	부분적 자유국	10,430	-
	태국	85	38	5.5	비자유국	5,340	.394(2010)
	필리핀	85	38	3.0	부분적 자유국	3,270	.430(2012)
	인도네시아	107	34	3.0	부분적 자유국	3,580	.381(2011)
	베트남	119	31	6.0	비자유국	1,740	.356(2012)
	라오스	145	25	6.5	비자유국	1,450	.362(2012)
	캄보디아	156	21	5.5	비자유국	950	.318(2011)
	미얀마	156	21	6.0	비자유국	-	-
	브루나이	-	-	5.5	비자유국	-	-
합계	평균치 = 38.2		평균치 = 4.9 자유국 = 0 개국 / 부분적 자유국 = 4 개국 / 비자유국 = 6 개국		평균치 = 10,100	평균치 = .374	

* 출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보고서(<http://www.freedomhouse.org>, 2015)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보고서(<http://www.transparency.org>, 2015)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2015)

** 부패인지지수(CPI)가 100이면 가장 청렴한 것을, 0이면 가장 부패한 것을 나타냄

*** 민주화지수 혹은 자유도(freedom ratings)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로 평가되며, 종합 평가에서 1.0-2.5는 '자유국가(F;free)', 3.0-5.0은 '부분적인 자유국가(PF;partly free)', 그리고 5.5-7.0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NF;not free)'로 간주됨

**** 소득불균형지수(Gini coefficient)는 최저 0에서 최고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균형이 심화된 것을 나타냄

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준점인 50점에 이르지 못한 국가가 조사대상 9개국 중 7개국이라는 점이 이들 국가의 부패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민주화지수 평균은 4.9로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부터 6.5인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심각하다.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부분적 자유국이고 나머지 6개국은 자유국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의 민주화는 아직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지표에 의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싱가포르의 54,040 달러로부터 캄보디아의 950 달러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크다. 그나마 10,000 달러가 넘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2개국 뿐이다. 지니계수도 문제가 있으나 결측값을 포함하면 그 심각성은 더 커지리라 여겨진다. 필리핀이 제일 상황이 심각하며 태국과 베트남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2>는 지난 20년간 아세안 국가의 부패인지지수(CPI)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5년 1.94(41개국 중 41위)에서 2014년 34(3.4/175개국 중 107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하지만 아직 부패 상황이 심각함을 그 CPI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아세안에서의 위상과는 달리 그 부패 상황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도 근소하나마 개선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77에서 38(3.8)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조금씩 투명성을 제고해왔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12년 이래 30(3.0)을 능가하는 수치로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개선도는 극히 미약하여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

미얀마 역시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3년 1.6(133개국

〈표 2〉 아세안 국가의 20년간 부패인지수 변화 (1995-2014)

연도 국가명	'95 (41) 개국	'96 (54) 개국	'97 (52) 개국	'98 (85) 개국	'99 (99) 개국	'00 (90) 개국	'01 (91) 개국	'02 (102) 개국	'03 (133) 개국	'04 (146) 개국	'05 (159) 개국	'06 (163) 개국	'07 (180) 개국	'08 (180) 개국	'09 (180) 개국	'10 (178) 개국	'11 (183) 개국	'12 (176) 개국	'13 (177) 개국	'14 (175) 개국
브루나이	-	-	-	-	-	-	-	-	-	-	-	-	-	-	5.5 (39)	5.5 (38)	5.2 (44)	5.5 (46)	60	-
캄보디아	-	-	-	-	-	-	-	-	-	-	2.3 (130)	2.1 (151)	2.0 (162)	1.8 (166)	2.0 (158)	2.1 (154)	2.1 (164)	2.2 (157)	20	21
인도네시아	1.94 (41)	2.65 (45)	2.72 (46)	2.0 (80)	1.7 (96)	1.7 (85)	1.9 (88)	1.9 (96)	1.9 (122)	2.0 (133)	2.2 (137)	2.4 (130)	2.3 (143)	2.6 (126)	2.8 (111)	2.8 (110)	3.0 (100)	3.2 (118)	32	34
라오스	-	-	-	-	-	-	-	-	-	-	3.3 (77)	2.6 (111)	1.9 (168)	2.0 (151)	2.0 (158)	2.1 (154)	2.2 (154)	2.2 (160)	21	26
말레이시아	5.28 (23)	5.32 (26)	5.01 (32)	5.3 (29)	5.1 (32)	4.8 (36)	5.0 (36)	4.9 (33)	5.2 (37)	5.0 (39)	5.1 (39)	5.0 (44)	5.1 (43)	5.1 (47)	4.5 (56)	4.4 (56)	4.3 (60)	4.9 (54)	50	52
미얀마	-	-	-	-	-	-	-	-	1.6 (129)	1.7 (142)	1.8 (155)	1.9 (160)	1.9 (179)	1.4 (178)	1.4 (178)	1.4 (176)	1.5 (180)	1.5 (172)	15	21
필리핀	2.77 (36)	2.69 (44)	3.05 (40)	3.3 (55)	3.6 (54)	2.8 (69)	2.9 (65)	2.6 (77)	2.5 (92)	2.6 (102)	2.5 (117)	2.5 (121)	2.5 (131)	2.3 (141)	2.3 (139)	2.4 (134)	2.6 (129)	34	36	
싱가포르	9.26 (3)	8.80 (7)	8.66 (9)	9.1 (7)	9.1 (7)	9.1 (6)	9.2 (4)	9.3 (5)	9.4 (5)	9.3 (5)	9.4 (5)	9.4 (5)	9.3 (4)	9.2 (4)	9.2 (3)	9.3 (1)	9.2 (5)	87	86	
태국	2.79 (34)	3.33 (37)	3.06 (39)	3.0 (61)	3.2 (68)	3.2 (60)	3.2 (61)	3.2 (70)	3.6 (64)	3.8 (64)	3.8 (59)	3.6 (63)	3.3 (84)	3.3 (80)	3.4 (84)	3.5 (78)	3.4 (80)	37	35	
베트남	-	-	2.79 (43)	2.5 (74)	2.6 (75)	2.5 (76)	2.6 (75)	2.4 (85)	2.4 (100)	2.6 (102)	2.6 (107)	2.6 (111)	2.6 (123)	2.7 (121)	2.7 (120)	2.7 (116)	2.9 (112)	31	31	

*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995-2014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
 ** 부패인지수는 0에서 10까지이며 0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심한 것(highly corrupt)을, 10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약한 것(very clean)을 의미함
 *** 2012년부터 0에서 100까지로 소숫점을 없앤 수치를 발표함
 **** 괄호 안은 조사대상국 중 순위별 의미함

중 129위)에서 2014년 21(2.1/175개국 중 156위)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개선을 드러내고 있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싱가포르의 CPI가 약간 퇴보(1995년 9.26 41개국 중 3위/2014년 84 175개국 중 7위)했다는 점이다. 아직 가장 투명한 나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IV. 부패의 정치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1. 부패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분석

<표3>은 지난 20년간 아세안 국가의 민주화 지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아쉬운 점은 자유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를 민주화지수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필리핀(3.0), 말레이시아/싱가포르(4.0), 브루나이/캄보디아/태국(5.5), 미얀마/베트남(6.0), 라오스(6.5)의 순이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근소하나마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태국은 오히려 최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5년 6.5(NF)에서 2014년 3.0(PF)으로 상당한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 미얀마는 7.0에서 6.0으로, 싱가포르는 5.0에서 4.0으로, 베트남은 7.0에서 6.0으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브루나이와 캄보디아도 6.0에서 5.5로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낙후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아세안 국가가 겪는 부패 상황이 비민주주의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설명을 하게 한다.

<표4>는 지난 20년간 전세계적 민주화지수의 국가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의 경우 191개국 중 76개국이 자유로운 국가(40%),

〈표 3〉 아세안 국가의 20년간 민주화지수 변화 (1995/96-2014/15)

연도 국가명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브루나이	6.0 (NF)	6.0 (NF)	6.0 (NF)	6.0 (NF)	6.0 (NF)	6.0 (NF)	6.0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캄보디아	6.0 (NF)	6.0 (NF)	6.5 (NF)	6.0 (NF)	6.0 (NF)	6.0 (NF)	6.0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5.5 (NF)
인도네시아	6.5 (NF)	6.0 (NF)	6.0 (NF)	5.0 (PF)	4.0 (PF)	3.5 (PF)	3.5 (PF)	3.5 (PF)	3.5 (PF)	3.5 (P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3.0 (PF)	3.0 (PF)
라오스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말레이시아	4.5 (PF)	4.5 (PF)	4.5 (PF)	5.0 (PF)	5.0 (PF)	5.0 (PF)	5.0 (PF)	5.0 (PF)	4.5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미얀마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필리핀	3.0 (P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3.0 (PF)	3.0 (PF)	3.5 (PF)	3.5 (PF)	3.5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싱가포르	5.0 (PF)	4.5 (PF)	5.0 (PF)	5.0 (PF)	5.0 (PF)	5.0 (PF)	5.0 (PF)	4.5 (PF)	4.5 (PF)	4.5 (PF)	4.5 (PF)	4.5 (PF)	4.5 (PF)	4.5 (PF)	4.5 (PF)	4.5 (PF)	4.5 (PF)	4.0 (PF)	4.0 (PF)	4.0 (PF)	4.0 (PF)	4.0 (PF)
태국	3.5 (PF)	3.0 (PF)	3.0 (P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2.5 (F)	3.0 (PF)	3.0 (PF)	5.0 (PF)	5.0 (PF)	4.5 (PF)	4.5 (PF)	4.5 (PF)	4.0 (PF)	4.0 (PF)	4.0 (PF)	4.0 (PF)	5.5 (NF)
베트남	7.0 (NF)	7.0 (NF)	7.0 (NF)	7.0 (NF)	7.0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5 (NF)	6.0 (NF)	6.0 (NF)	6.0 (NF)	6.0 (NF)	6.0 (NF)	6.0 (NF)	6.0 (NF)	6.0 (NF)	6.0 (NF)	6.0 (NF)	6.0 (NF)

* 출처: Freedom House Freedom Ratings, 1995/96-2014/15 (https://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world#_VdhKGUOwepo)
 ** 민주화지수(자유도는 1.0에서 7.0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민주적인(free) 국가를, 7에 가까울수록 보다 비민주적인(not free) 국가를 의미함
 ***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평가한 지수를 토대로 일국의 자유도(freedom status) 즉 민주화 수준을 평가함
 **** 1.0-2.5는 자유로운 국가(F, free nation), 3.0-5.0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F, partly free nation), 5.5-7.0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NF, not free nation)를 의미함

〈표 4〉 지난 20년간 전세계적 민주화지수 국가별 분포 (1995/96-2014/15)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민주화 수준	(191 개국)	(191 개국)	(191 개국)	(191 개국)	(192 개국)	(192 개국)	(192 개국)	(192 개국)	(192 개국)	(192 개국)	(192 개국)	(193 개국)	(193 개국)	(193 개국)	(194 개국)	(195 개국)	(195 개국)	(195 개국)	(195 개국)	(195 개국)
자유로운 국가 (F)	76 (40%)	79 (41%)	81 (42%)	88 (46%)	85 (44%)	86 (45%)	85 (44%)	89 (46%)	88 (46%)	89 (46%)	89 (46%)	90 (47%)	90 (47%)	89 (46%)	89 (46%)	87 (45%)	87 (45%)	90 (46%)	88 (45%)	89 (46%)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PF)	62 (32%)	59 (31%)	57 (30%)	53 (28%)	60 (31%)	58 (30%)	59 (31%)	55 (29%)	55 (29%)	54 (28%)	58 (30%)	60 (31%)	60 (31%)	62 (32%)	58 (30%)	60 (31%)	60 (31%)	58 (30%)	59 (30%)	55 (28%)
자유롭지 않은 국가 (NF)	53 (28%)	53 (28%)	53 (28%)	50 (26%)	47 (25%)	48 (25%)	48 (25%)	48 (25%)	49 (25%)	49 (26%)	45 (24%)	45 (23%)	43 (22%)	42 (22%)	47 (24%)	47 (24%)	48 (24%)	47 (24%)	48 (24%)	51 (26%)

* 출처: Freedom House Freedom Ratings, 1995/96-2014/15 (<https://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world#V/dhKGUOwego>)
 ** 민주화지수(자유도)는 1.0에서 7.0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민주적인(free) 국가를, 7에 가까울수록 보다 비민주적인(not free) 국가를 의미함
 ***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평가한 지수를 토대로 일국의 자유도(freedom status) 즉 민주화 수준을 평가함
 **** 1.0-2.5는 자유로운 국가(free nation), 3.0-5.0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nation), 5.5-7.0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nation)를 의미함

62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32%), 53개국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28%)이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195개국 중 89개국이 자유로운 국가(46%), 55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28%), 51개국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26%)로 개선된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의 민주화지수 국가별 분포인 10개국 중 자유로운 국가(0%)가 없고, 6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60%), 4개국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40%)인 것과 크게 대조가 된다. 세계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민주주의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지역이 아세안 국가가 위치한 동남아시아인 것이다.

민주화지수를 부패인지지수와 비교하여 언급하면, 부패인지지수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미얀마의 순으로 민주화지수의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을 두 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가 열위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태국과 브루나이는 약간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화 수준과 투명성 수준 간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관계가 큰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부패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무색하게 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세계 7위의 투명성을 자랑하는 국가가 민주화 수준에 있어서 4.0으로 부분적인 자유국이라는 점은 싱가포르의 투명성이 인식의 변화에 토대를 둔 문화적 우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를 유발하는 제도적 장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한다. 싱가포르 사례는 우리가 계속 지켜볼 연구대상인 것이다.

아세안 국가의 낙후된 민주화 의식과 이에 따른 낮은 투명성 수준은 인권과 관련된 이들 국가의 주장에 잘 드러난다. 1993년 방콕선언은 “인권이 그 본질에 있어서 보편적이지만 국제적 규범의 설정이 역동적이고 진화중이라는 맥락에서 국가별, 지역별 특성과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인권을 고려하여야만 한다고 인식한다.”고 하였다. 방콕 선언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시아적 특수성으로 인해 서구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시아적 인권 개념을 창조하겠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인권문제에 매달리는 서구의 외교정책은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패권적 음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양성과 보편성이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싱가포르가 민주주의의 다양한 체제 가운데 하나라는 확신에서 연유한 순환논리이다. 싱가포르가 민주주의라면 다양한 민주주의 체제에 싱가포르의 경우가 포함될 것이고, 따라서 다양성과 보편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여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판단하면 안타깝게도 싱가포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리관유에게 싱가포르는 틀림없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를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는 번영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기준은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부가 번영과 안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현하느냐이다. 번영과 안정을 실현하는 정부가 곧 ‘좋은 정부’이고, ‘좋은 정부’가 곧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특정한 정치이론이나 이상에 얽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좋은 정부’이므로 민주주의 정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주

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부의 기능 정도 혹은 통치력을 채택하는 것은 싱가포르를 민주주의 체제로 인정받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정부의 통치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정연식·이상환 2000).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명제, 즉 인권은 결코 부정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보편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 확보와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 신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서구적 인권 개념을 비서구 지역에 그대로 강요하는 전략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만약 문화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서구에서 생산된 인권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인권에 대한 강제되지 않은 합의”가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통문명적(Intercivilizational)’ 접근을 통해 상이한 문화 속에서 근사한 개념들의 교합점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아시아 지역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은 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에 도전하기보다 토착적 인권 전통을 발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아시아인들이 인권의 가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연식·이상환 2000).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인권의 개념을 설정하고 개념정의에 따른 인권 기준의 마련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보편적인 인권 기준의 설정을 막지 못하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인권보호 혹은 민주화를 위한

보편적인 기준 설정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국가적인 특수성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문화상대주의에 토대를 둔 인권 개념의 특수성 주장을 펼 근거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없는 투명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예를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 제고가 민주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듯이 민주화가 진정한 부패 척결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표5>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에 의하면 조사대상국 중 싱가포르가 가장 투명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떨어진다. 조사대상 28개국 중 싱가포르 8위, 말레이시아 15위, 인도네시아 25위로 주요 수출기업의 뇌물공여에 있어서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의 부패통제지수(Control of Corruption)는 공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행사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그 지수의 범주는 -2.5에서 2.5사이로 수치가 높을수록 보다 나은 통제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 국가의 부패통제지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싱가포르 2.18, 브루나이 0.86, 말레이시아 0.12, 태국 -0.34, 베트남 -0.58, 인도네시아 -0.73, 필리핀 -0.82, 라오스 -1.07, 캄보디아 -1.21, 미얀마 -1.68이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마이너스(-) 수치로 부패통제를 할 만한 거버넌스의 수준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통제 거버넌스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공개 및 통제 지수(Open Budget Index)는 주요 예산기록물의 공개 여부와 접근 가능성 및 결정과정 참여기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의미하는데, 0은 정보 부족 혹은 부재(scant or no information)를, 100은 광범위한 정보접근(extensive information)을

<표 5> 아세안 국가의 부패 세부 현황

국가명	부패 지수/주요 28개국 중 순위 (2011)	예산 공개 및 통제 지수 (2010)	전세계적인 부패 척도 2013															
			지나해 뇌물 공여 경험 (%)	정부의 부패 척결 신뢰도 (%)	최근 부패 증가 인식	정당 임명부 (3.8)	의회 임명부 (3.6)	경찰 (3.7)	경찰 사적영역 (3.3)	기업 및 인문 공적영역 (3.1)	공무원 및 공적영역 (3.6)	사법 부 (3.6)	시민 단체 (2.7)	종교 기관 (2.6)	군부 (2.9)	교육 영역 (3.2)		
브루나이	-	0.86	-	-	-	-	-	-	-	-	-	-	-	-	-	-	-	
캄보디아	-	-1.21	15	57	72	감소	2.8	2.4	3.1	2.7	2.3	2.9	3.7	1.7	1.9	2.6	2.6	
인도네시아	7.1 (25)	-0.73	51	36	33	증가	4.3	4.5	4.5	3.4	4.0	4.0	4.4	2.8	2.7	3.1	3.2	
라오스	-	-1.07	-	-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7.6 (15)	0.12	39	3	48	무변화	3.8	3.3	4.0	3.2	2.0	3.3	3	2.6	2.0	2.3	2.4	
미얀마	-	-1.68	-	-	-	-	-	-	-	-	-	-	-	-	-	-	-	-
필리핀	-	-0.82	55	12	28	감소	3.7	3.5	4.0	2.9	2.2	3.8	3.5	2.7	2.3	3.2	2.8	
싱가포르	8.3 (8)	2.18	-	-	30	-	-	-	-	-	-	-	-	-	-	-	-	-
태국	-	-0.34	42	18	22	증가	4.0	3.4	4.0	3.2	2.8	3.7	2.5	2.6	2.4	2.8	3.1	
베트남	-	-0.58	14	30	37	증가	2.8	2.7	4.0	2.9	2.8	3.6	3.5	2.4	2.2	2.8	3.4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995-2014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는 선진국과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공여행위를 하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임. 0에 가까울수록 뇌물공여가능성이 커지고, 10에 가까울수록 그 가능성이 작아짐.

***부패통제지수(Control of Corruption)는 공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행사될 가능성을 의미함. 그 지수의 범주는 -2.5에서 2.5사이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보다 나은 통제커버넌스를 보여주는 것임.

****예산 공개 및 통제 지수(Open Budget Index)는 주요 예산기록물의 공개 여부와 접근 가능성 및 결정과정 참여기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의미함. 0은 정보 부족 혹은 부재(scan or no information)를, 100은 광범위한 정보접근(extensive information)을 나타냄. 광범위한 정보: scores 81 ~ 100, 상당한 정보: scores 61 ~ 80, 약간의 정보: scores 41 ~ 60, 최소한의 정보: scores 21 ~ 40, 정보 부족 혹은 부재: scores 0 ~ 20

*****전세계적인 부패 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는 부패 경험과 견해에 관한 유일한 전세계적인 여론조사 결과임. 특정한 연도의 국가별 부패수준을 나타냄. 국가 부문별 대중의 부패인식지수는 전혀 부패가 없는 수준을 나타내는 1에서 극단적인 부패 수준을 말하는 5까지의 척도임. 괄호 안은 세계 107개국 평균치.

나타낸다. 그 지수를 범주화하면, 광범위한 정보(81~100), 상당한 정보(61~80), 약간의 정보(41~60), 최소한의 정보(21~40), 정보 부족 혹은 부재(0~20)로 구분된다. <표5>에 의하면, 조사대상 6개국 중 61이상의 지수는 없고 ‘약간의 정보’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는 필리핀(55), 인도네시아(51), 태국(42)이고, ‘최소한의 정보’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39)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각각 15와 14로 ‘정보 부족 혹은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예산 공개 및 통제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의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부패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는 부패 경험과 견해에 관한 유일한 전세계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특정한 연도의 국가별 부패수준을 나타낸다. 국가 부문별 대중의 부패인지지수는 전혀 부패가 없는 수준을 나타내는 1에서 극단적인 부패 수준을 말하는 5까지이다. 지난해 뇌물공여 경험에 관한 설문에 대해 캄보디아의 경우 5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을 보면 부패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에서는 3%로 뇌물공여란 극히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의 부패척결 신뢰도에 있어서 캄보디아 국민이 72% 신뢰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척결 노력에 대한 기대도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부패 증감에 대한 인식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에서 증가인 것을 보면 최근 이들 국가의 부패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국가 부문별 대중의 부패인지지수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의 경우 사법부 부문이 가장 부패가 심각하다고 대중이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기관 부문이 가장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장 심각한 부문

은 의회·입법부와 경찰이며, 가장 투명한 부문은 언론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경찰 부문의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역시 종교기관과 언론이 가장 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찰과 언론의 부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태국의 경우 경찰과 정당의 부패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종교기관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경찰 부문의 부패 상황을 대중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종교기관의 투명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요약하면,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 부문이 가장 부패한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고, 종교기관이 그나마 가장 투명한 영역임을 드러내고 있다.

2. 부패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표6>은 아세안국가의 경제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싱가포르(US\$ 55,150)와 말레이시아(US\$ 10,660)를 제외하면 모두 10,000 달러 이하로 소득수준이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순이나 후발개도국 혹은 신흥산업국 범주에 있거나 빈곤국에 지나지 않는다. 1인당 국민총소득을 부패인지지수와 비교하여 언급하면, 부패인지지수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미얀마의 순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의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고성장률 국가로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가 있으며 이어 필리핀, 베트남/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가 있다. 부패가 심각한 3개국이 고성장률 국가라는 점을 해석하면 고도성장과정 속에서의 부패의 심각성을 다시금 파악할 수 있다.

〈표 6〉 아세안 국가의 경제 현황 (2010~2014년)

연도 국가명	1인당 국민총소득 (현 US\$ 기준)				경제성장률 (연 %)				외국인직투자 순유입 (현 US million \$ 기준)				지니계수 및 상위10% 소득점유율			
	'10	'11	'12	'13	'14	'10	'11	'12	'13	'14	'10	'11	'12	'13	'14	
브루나이	-	-	36,710	-	-	2.6	3.4	0.9	-1.8	5.3	626	1,208	859	895	-	
캄보디아	740	810	880	950	1,010	6.0	7.1	7.3	7.4	7.0	735	795	1,441	1,345	-	
인도네시아	2,540	3,020	3,600	3,760	3,650	6.2	6.2	6.0	5.6	5.0	15,292	20,565	21,200	23,344	-	
라오스	980	1,090	1,270	1,450	1,600	8.5	8.0	8.0	8.5	7.5	279	301	294	-	0.362	
말레이시아	8,150	8,840	9,820	10,420	10,660	7.4	5.2	5.6	4.7	6.0	10,886	15,119	9,734	11,583	-	
미얀마	-	-	-	-	1,270	-	-	-	8.2	8.5	901	2,520	1,334	2,255	-	
필리핀	2,740	2,620	2,960	3,270	3,440	7.6	3.7	6.8	7.2	6.1	1,070	2,007	3,215	3,737	6,200	
싱가포르	44,790	48,330	51,390	54,580	55,150	15.2	6.2	3.4	4.4	2.9	55,076	48,002	56,659	64,793	67,522	
태국	4,320	4,620	5,210	5,360	5,410	7.8	0.1	6.5	2.9	0.7	9,104	2,468	12,895	14,305	12,720	
베트남	1,270	1,390	1,560	1,740	1,890	6.4	6.2	5.2	5.4	6.0	8,000	7,430	8,368	8,900	-	

* 출처: World Bank Data, 1995~2014 (<http://data.worldbank.org/>)

**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의미함. 0.0~0.2: 빈부격차 거의 없음 (현재 국가 없음) / 0.2~0.3: 빈부격차가 대단히 적음 (스웨덴,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등) / 0.3~0.35: 빈부격차가 적은 편임 (한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 / 0.35~0.4: 빈부격차가 보통임 (일본, 인도, 페니시엘라 등) / 0.4~0.5: 빈부격차가 높은 편임 (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 / 0.5~0.6: 빈부격차가 대단히 높음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 0.6~0.7: 빈부격차가 심각한 정도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등) / 0.7~ : 사회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현재 국가 없음)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에 있어서도 상위 5개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 베트남을 제외한 4개국이 부패인지지수 상위 5개국 안에 드는 것을 보면 투명성과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간에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투자와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투명성을 제고할만한 소득수준과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수준의 낙후가 투명성 개선을 뒤처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의식 수준과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간별로 언급하면, 0.0~0.2는 '빈부격차 거의 없음'을 나타내고 현존하는 그런 국가는 없다. 0.2~0.3은 '빈부격차가 대단히 적음'을 나타내고 스웨덴,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0.3~0.35는 '빈부격차가 적은 편임'을 나타내며 한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0.35~0.4는 '빈부격차가 보통임'을 말하며 일본, 인도, 베네수엘라 등이 그 국가들이다. 0.4~0.5는 '빈부격차가 높은 편임'을 나타내고 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이 이에 해당된다. 0.5~0.6은 '빈부격차가 대단히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이 그 국가들이다. 0.6~0.7은 '빈부격차가 심각한 정도임'을 말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등이 이에 해당된다. 0.7~은 '사회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나타내며 그런 국가가 존재하기는 어렵다.

<표6>에 의하면, 조사대상 국가 중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이 빈부격차가 높은 편이고,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은 빈부격차가 보통인 수준이다. 캄보디아가 오히려 빈부격차가 적은 편이다. 투명성과 빈부격차 간에는 그 연관성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부패가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대목이다.

국가투명성과 사회·경제적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상관관계분석(Pearson's r)을 활용한다. <표7>이 보여주는 바는 부패 관련 기존의 가설과 거리가 먼 결과이다. 그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민주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투명성(반부패 수준)이 높다.
- 가설 2: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투명성이 높다.
- 가설 3: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반부패 수준이 낮다.
- 가설 4: 외국인직접투자순유입이 높을수록 반부패 수준이 높다.
- 가설 5: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반부패 수준이 높다.

<표 7> 아세안 국가의 부패와 사회경제적 지표간의 상관관계

사회경제적 지표 부패인지지수	민주화지수	1인당국민순 소득 (현US\$기준)	경제성장률 (연%)	외국인직접 투자순유입 (현US\$ million기준)	지니계수
부패인지지수	+0.28	+0.04	-0.05	+0.04	-0.14

*상관관계 계수의 범주는 -1.0~+1.0이고, +/-는 관계의 방향을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약한 것을,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한 것을 나타냄

아세안 국가의 경우에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 1의 경우 아세안

사례에는 적용가능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민주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싱가포르와 같은 예외적인 사례가 가설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 2의 경우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나 그 강도가 미약하여 개별 사례에 따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가설 3도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나 그 강도가 미약하다. 고도성장 과정에 있는 국가 사례가 이 가설과 맥을 함께하나 전반적으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설 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설 5의 경우도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나 그 강도는 미약하다. 통계적으로 보면 10개국 사례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으나 초보적이거나 그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볼 때 아세안 사례는 부패 관련 일반이론과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라는 지리적 인접성과는 달리 국가 간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른데 그 이유가 있다. 즉, 양적인 통계분석과 함께 향후 질적인 사례분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나마 관계의 강도는 낮으나 방향이 가설 1을 제외하고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이론의 적실성을 말할 수 있다.

〈표 8〉 민주화 수준과 국가투명성 간 교차분석

국가투명성		정치민주화	민주화 수준	
			부분적 자유국	비자유국
투명성 수준	상대적으로 높음(50이상)		2	0
	상대적으로 낮음(50미만)		2	5

*브루나이는 결측값

만약 아세안 국가들을 상, 중, 하 세 등급 혹은 상, 하 두 등급으로 나누어 범주화하고 교차분석을 행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예를 들어, 민주화 수준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도네시아/필리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 자유롭지 못

한 국가(태국/캄보디아/브루나이, 베트남/미얀마, 라오스)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투명성 수준의 경우 전자는 평균 52(34, 38, 84, 52), 후자는 평균 27.2(38, 21, 브루나이는 결측값, 31, 21, 25)이다. 선형 회귀분석(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교차분석을 할 경우 민주화 수준과 투명성 간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경제 통계자료 중 1인당 총소득을 기준으로 투명성 수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인당 총소득의 경우 세 범주로 아세안 국가들을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0 달러이상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000 달러 이상에서 10,000 달러 미만 국가(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3,000 달러 미만 국가(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브루나이는 결측값)로 구분한 후 그 투명성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범주의 경우 평균치는 68, 두 번째 범주의 경우 평균치는 37, 세 번째 범주의 경우 평균치는 26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과 투명성 수준 간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화 수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형 회귀분석(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교차분석을 할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과 투명성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표 9〉 경제발전과 국가투명성 간 교차분석

국가투명성		경제발전	1인당 국민총소득		
			상 (US\$ 10,000이상)	중 (US\$ 3,000이상 10,000미만)	하 (US\$ 3,000미만)
투명성 수준	상대적으로 높음(50이상)		2	0	0
	상대적으로 낮음(50미만)		0	3	3

*브루나이와 미얀마는 결측값

결국 선형회귀분석의 경우 민주화 수준으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

면 싱가포르가 이레(outlier)로서 그 통계치를 왜곡시키게 되며, 1인당 총소득으로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면 필리핀이 약간의 이레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주화 시켜서 교차분석 방식을 택할 경우 그 연관성(가설1, 가설2)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일반이론에 합치하는 결과가 된다.

정치적 민주화와 국가투명성의 연관성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양자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개진되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상관관계로서 "민주화는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입장이다. 즉,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가 적다는 것이다. 둘째, 첫째와는 상반되는 입장으로 "민주화가 부패를 촉진시킨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자유언론과 정치적 반대파가 용인되는 개방된 사회가 권위주의체제에 비해 더 부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심지어 민주제도가 부패의 유인을 제공하고, 반복되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유권자를 관리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부패구조가 체계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셋째, 민주주의와 부패수준 사이에 단순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부패문제는 단순히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만 해결되지 않으며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의 양자적 상관관계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이상환 2007a/2007b). 이를 아세안 국가에 적용해 본 이 연구의 결과는 첫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의 중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와 국가투명성 간 상관관계를 보면, 그 관계의 방향이 음(-)이어야 하는데 양(+)의 관계로 일반적인 가설을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범주화 시켜서 살펴보면 즉 싱가포르의 이레(outlier)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면

그 연관성이 나타나며 민주화 수준과 투명성 수준 간에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각종 경제 지표와 국가투명성 간 상관관계도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나 강도가 미흡하여 그 가설을 입증하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범주화시켜서 살펴보면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그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투명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인과관계의 방향은 단정할 수 없으나 경제발전과 국가투명성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V. 결론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아세안 국가는 부패 관련 일반 이론과는 거리감이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했던 기존 이론의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민주화 수준과 국가투명성 수준의 연관성이고, 둘째는, 경제발전 수준과 국가투명성 수준의 연관성이다.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아세안 국가에는 지역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국가투명성 수준에 있어서 세계 상위 10위안에 드는 싱가포르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은 아직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의 예를 제외하면 민주화 지수와 부패인 지지수 간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지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경제발전 수준과 국가투명성 수준 간의 관계도 경제발전을 대변하는 지표에 따라 그 적용가능성이 달라진다. 즉 지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경제지표와 부패인지지수 간의 연관성은 말하기 쉽지가 않다. 1인당 국민총소득과 같은 일부

지표만 그 연관성을 개괄적으로나마 주장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이 연구는 일변량 통계자료와 초보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10개국에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기본적인 통계방법을 가지고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차 분석 즉 범주화시킨 자료를 토대로 연관성을 파악할 경우 그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몇몇 이례(outlier)가 부패 관련 일반 이론의 지역적 적용을 어렵게 하나 이를 범주화시켜서 분석할 경우 일반 이론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나아가 후속연구에서 개별국가적 사례분석을 통해 일반이론을 근거로 한 경험적 통계분석 결과를 보완한다면 보다 나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주로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로 시작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다자간 노력은 국제적인 거래와 계약에 있어서 만연된 부패가 자유롭고 투명한 경쟁정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공식적인 제도와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패를 완전히 없애는 국제협력이란 기대하기 힘들다. 국제사회가 각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협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 그리고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를 지역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는 보여주고 있으나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의 상관관계는 일반 이론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정

치민주화 없이 투명성 제고가 가능한 것인가. 도시국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의 예를 적용하여 일반 이론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사례 분석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것이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는 엄격한 규율이 부패 행위를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며, 이를 부패 척결을 위해 억압으로 느끼지 않는 싱가포르의 국민적 정서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인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아세안 국가의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투명성 제고가 민주화 및 경제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부패척결이 가능하며 경제발전이 앞선 국가에서 부패척결이 용이하다. 나아가 투명성이 제고된 경우에만 경제정의 및 경제발전이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에서 아직 투명성 제고는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부패와 관련하여 고발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아세안 국가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국가 투명성이다. 이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역량 제고와 민주화 흐름은 국가 투명성 제고의 배경요인이며 경제발전이 그 촉매가 되는 것이다.

투 고 일: 2016년 01월 15일

심 사 완 료 일: 2016년 02월 02일

계 재 확 정 일: 2016년 02월 22일

참고문헌

- 이상환. 2007a. “국제사회의 반부패에 대한 이해: 세계화 및 민주화와의 연
관성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3).
- _____. 2007b. “국제적 반부패 논의에 대한 고찰: 한-중-일의 시각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25(1).
- _____. 2015. “아세안 국가의 부패와 정치·경제적 발전: 국가투명성, 정
치민주화,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 『전략지
역심층연구논문집 I: 동남아시아』.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연식 · 이상환. 2000. “미국의 인권외교정책: 중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
『21세기 국제관계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박영사.
- Brunetti, Aymo · Gregory Kisunko · Beatrice Weder. 1997. “Institutional
Obstacles for Doing Business: Data Description and Methodology
of a Worldwide Private Sector Survey.” *World Bank Working Paper*
1-75.
- Fisman, R. · Robera Gatti. 2002.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Evidence
across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3.
- Gerring, John · Strom C. Thacker. 2002. "Political Institutions and Human
Development." *Journal Northeast Universities Development Consortium
Conference Paper* 1-45.
- Gupta, Sanjeev, Hamid Davoodi & Rosa Alonso-Terme. 2002. "Does
corruption affect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Economics of
Governance* 3: 23-45.
- Herrera, A. M. · P. Rodriguez. 2002. "Bribery and The Nature of
Corruption." *Paper presented at the 2002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 Keefer, P. · St. Knack. 1996.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 *Economics and Politics* 7: 207-227.
- Lambsdorff, Johann Graf. 1999. "Corruption in Empirical Research-A Review." *Transparency International Working Paper* 1-17.
- Lancaster, Thomas D · Gabriella R. Montinola. 1997. "Toward a methodology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corruption." *Crime, Law and Social Change* 27: 185-206.
- Maitland, E. 2002. "Modelling Economic Corruption: Implication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Paper presented at the 2002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 Mauro, Paolo. 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3): 681-712.
- _____. 1998. "Corruption: Causes, Consequences, and Agenda for Further Research." *Finance and Development* 35(1): 11-14.
- Paldam, Martin. 1999. "The Big Pattern of Corruption, Economics, Culture and Seesaw Dynamic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8(2): 215-240.
- Tanzi, Vito · Hamid Davoodi. 1997. "Corruption, Public Investment and Growth." *IMF Working Paper* IMF: 1-23.
- Warren, Mark E. 2004. "What Does Corruption Mean in a Dem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2).
- Wheeler, David · Ashoka Mody. 1992. "International Investment Locations Decisions: The case of U.S.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3(1-2): 57-76.

-인터넷 자료-

Freedom House (<http://www.freedomhouse.org>) (검색일: 2015.12.25.)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검색일: 2015.12.25.)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2015.12.25.)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검색일: 2015.12.25.)

Empirical Analyses on Current Situations of Corruption in ASEAN

LEE, Sang-Hw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most important task of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ASEAN i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shows that today's tides of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ransparency of ASEAN countries. The associations among anti-corruption,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well verified in the groups of nations with the higher levels of GNI per capita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It concludes that the levels of GNI per capital are related to national transparency in ASEAN. Briefly, the three phenomena including transparency,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go together in ASEAN with some exceptions.

Keywords: ASEAN, corruption, transparency, political democratization, economic development